

##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한미동맹의 과제

2017년 3월

대표집필 전재성

EAI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 서울대학교 교수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2개월이 경과했지만 미국의 국내외 정책을 결정짓는 핵심단어는 여전히 “불확실성”이다.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환태평양파트너십(TPP)을 전면 취소하고 주요 이슬람 국가 국민들의 입국 금지를 단행하는 등 대선 캠페인 때의 정책을 그대로 실행하는 듯했다. 그러나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려는 트럼프 케어가 좌초되고 공정무역의 기치 하에 작동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반발도 등장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내세웠지만 외교안보라인은 여전히 러시아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적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대선 당시 러시아의 선거 개입 여부도 수사 대상에 올라왔다. 공화당 주류가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얼마나 협조할지, 민주당과 미국민의 반감이 수그러들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권 초의 허니문 기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큰 도전의 기간이 되고 있다

한국에게 관심이 큰 것은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이다. 취임 초기에 드러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겪고 있는 다양한 국내경제문제를 해결한다는 공약을 던지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취임 첫 날부터 달성하고자 한 경제관련 정책들이 있었고, 취임 후 100일 동안 국내경제 회복 성과를 내겠다고 장담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 초기의 정책은 경제정책 위주일 수밖에 없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경제의 성장, 중산층의 경제회복, 제조업 부활, 경제격차 감소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문제는 미국 경제의 문제가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해결책을 대외 경제관계에서 주로 찾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무역의 기치를 내걸고 중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경제대상국에 대해 압박을 가해왔고, 이러한 경제정책은 직접적으로 외교안보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국내경제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기 전까지 경제 위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외교안보의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기간부터 현재까지 경제와 독립적인 외교안보 영역에서 특별한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라는 국가전략의 비전을 내걸었지만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여전히 모호하다. 오바마 정부가 추구했던 정책 중에서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하고 정책 방향도 일정 부분

- EAI는 2017년을 맞아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한국 외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라운드테이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본고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저자가 대표집필 하였습니다. 본고의 내용이 반드시 다른 토론회 참가자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토론자 상호간 합의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한미동맹의 과제” 979-11-87558-46-0  
95340

###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보다는 중동과 테러 문제를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슬람국가(IS) 격퇴가 현재 국방전략의 가장 큰 목표로 거론된다. 국방비를 증가하여 대테러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미국의 본토방위에 힘쓴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시아, 유럽, 중동 등 각 지역에 산적한 안보문제를 어떠한 방향에서 해결하고 미국의 지구적 개입을 어떠한 수준에서 유지해 나갈지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결여하고 있다.

셋째, 트럼프 정부의 안보정책을 수행하는 외교안보라인이 확정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백악관과 국방부, 국무부 등 외교안보 관련 부처의 장관급들이 임명되기는 했지만 각 지역과 이슈별 실무를 담당하는 인사들은 아직도 임명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외교안보라인을 정비하여 어떠한 속도로 외교안보전략을 수행할지는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외교안보라인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이념 중심의 인물들과 미국 공화당의 전통 외교안보라인을 따르는 주류의 흐름으로 분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스티브 배넌으로 대표되는 트럼프 정부의 미국 중심 이데올로기가 외교안보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국방부와 국가안보위원회(NSC)의 주요 군 출신 인사들은 기존의 주류 외교안보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방향의 흐름이 어떠한 긴장관계를 산출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를 결정할 주요 변수들은 무엇인가? 향후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관해서는 다음의 점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경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외국의 불공정무역과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좌절하고 있는 미국 중산층과 제조업자들을 격려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유용한 전략이다. 그러나 미국 국내총생산의 13% 정도만이 대외무역에서 산출되는 현실에서 경제문제의 원인이 대외무역에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미국의 신자유주의 모델이 가져오는 문제점과 빈부격차, 금융자본주

의 문제점, 노동절약적인 기술의 발전, 글로벌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들이 겹쳐서 경제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이 일단 경제회복과 성장의 성과를 가져올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한계를 보일 경우 트럼프 정부의 정치적 기반과 경제정책에 영향을 받는 안보정책의 향방이 바뀔 수도 있다. 따라서 단기적 현상과 별도로 미국의 중장기 전략, 특히 2년 후의 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정책 방향을 예상하면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 경쟁 속에서 외교안보대전략을 산출해온 미국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낮은 존재이며, 여전히 지구적 리더십을 행사하는 미국을 상대해야 하는 국가들도 트럼프 정부의 노선은 조심스럽게 지켜보아야 할 대상이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많은 국가들은 미국의 정책 노선이 무엇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 보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공동이익 영역을 발견하고 최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이 경제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중국과 독일, 일본 등은 미국의 경제회복을 위해 미국에 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려 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와의 네트워크 강화에 힘쓰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정부와의 밀접한 관계 설정을 둘러싸고 경쟁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외교안보 정책의 내용들이 어떻게 지속되고 변화될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중동 중시 정책, 대테러전 수행 전략, 동맹들의 부담 분담 요구 등의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경제정책 수요의 관점에서 동맹들의 공정 분담 요구를 내세우고, 나토의 문제를 지적하는 등 기존의 동맹들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주장하는 등 미국 외교안보의 주류 의견과는 거리가 있는 행보를 했다. 반면 매티스 국방부 장관 등 군 출신 인사들은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러시아의 위협을 경고하는 등 대통령과 상반된 정책 라인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러한 긴장이 어떠한 정책결과를 가져올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관점에서 미국의 외교안보대전략은 우리의 국익에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지구적 안보전략, 동아시아 전략, 대중 전략, 경제 전략, 그리고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 북핵 문제에 대한 전략 등은 한미동맹의 미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아시아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었다. 오바마 정부의 중동 전략을 비판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국가(IS)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고 대테러 전쟁 수행의 중요성에 무게를 실으면서 아시아가 상대적으로 경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대두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재균형전략은 미국의 경제회복과 지정학적 리더십 유지라는 구조적 필요에서 대두된 것이기 때문에 아시아의 중요성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생각과는 별개로 유지될 것이라는 견해도 미국 내에서 강한 조류를 형성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의 아시아 정책 담당자들은 아직 인사정책이 충분히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Tillerson 국무장관의 한중일 방문 계기에 아시아에 대한 적극적 개입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취임 직후에 있었던 Mattis 국방장관의 첫 번째 해외 순방지로 한국과 일본이 선택된 것도 아시아 및 기존 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미국의 대중 전략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미중 관계 속에서 한국의 외교전략이 딜레마에 처해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13년 6월 오바마 정부와 시진핑 정부는 소위 신형 대국관계라는 기치 하에 서로의 핵심이익을 존중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구체적인 이슈들에서는 상대적 이익을 둘러싸고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큰 틀 하에서는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남중국해 문제가 악화되고 북핵을 둘러싼 긴장관계가 지속되면서 미중관계가 예전 같지 못하고, 미국 내에서도 중국에 대한 압박과 균형의 분위기가 점차 강화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불공정 무역과 환율 조작을 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미중관계에서 4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고 환율조작을 시정시키겠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4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중관계의 큰 틀이 논의될

것이지만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일정한 정도의 긴장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기존의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를 다시 강조함으로써 대선 기간 중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기존 동맹국들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공정한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공약을 약화시키겠다는 논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부담분담과 공약 유지의 긴장 속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전략의 기초는 향후에도 유지될 전망이다. 동북아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는 별도로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중국해 문제 등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국가들과의 동맹 강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동아시아 전체에 대해 어떠한 안보 전략을 제시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넷째,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경제 아키텍처 구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또한 관심사이다. 오바마 정부는 환태평양파트너십(TPP)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미국 내 비준에 최선을 다 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중에도 비준 반대의 움직임이 강했던 것은 사실이나 개정을 통해서라도 동아시아에 대한 경제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체적인 합의가 존재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환태평양파트너십 등 다자경제체가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관심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봄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전략적 함의를 가지는 다자경제전략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하게 된 것인데, 이러한 전략이 향후 어떠한 반향을 불러올지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미동맹을 둘러싼 현안들이 등장하고 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이다. 북한은 한편으로는 핵무기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북한은 트럼프 정부 등장 이후 미사일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엔진 실험 등을 실행하면서 북핵 문제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 중에 미사일 발사를 하는가 하면, 킬러스 미 국무장관의 방중 기간 중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엔진 실험을 단행했다. 이러한 행위는 북핵 문제의 급박성을 시위함으로써 북한과의 관계 설정이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외교안보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이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미국의 본토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노출될 경우 미국이 국내여론도 더욱 급박해질 것이고, 향후의 상호억제를 둘러싼 새로운 난제들이 도출될 것이다. 미국은 북핵 문제를 더 이상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 안보문제로 고려할 수 없게 되었고 미국 본토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북핵 문제의 급박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취임 이후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월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아마도 북핵 문제 해결책을 둘러싼 안들이 도출될 것이고 이는 향후 미국의 북핵 정책은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이 생각할 수 있는 북핵문제의 해결책들은 이미 상당 부분 논의된 바 있다. 오바마 정부는 소위 전략적 인내 정책을 내세웠고, 그 주요 구성부분은 억제(deterrence)와 압박(pressure), 그리고 외교(diplomacy)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을 압박하면서 비핵화를 둘러싼 믿을 만한 북한의 행위가 있을 때까지 국제공조와 대북 제재의 수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비핵화를 둘러싼 의미 있는 진전이 부재한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는 전략적 인내 정책의 공식적 폐기를 선언했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으로는 군사적 수단의 적극적 사용과 보다 강력하고 스마트한 대북 경제제재를 들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선제 공격과 더 나아가 핵미사일 개발 및 저장기지에 대한 선제공격 등 군사적 수단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자체가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선제공격 자체의 군사적 가능성과 성공의 정도, 그리고 북한의 반격으로 인한 한국 피해 극대화의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실행가능성은 회의적이다. 한미군사훈련을 강화

하고 김정은에 대한 개인적 공격 성공도를 높이고 다양한 전략 무기를 순환 배치하는 등의 군사적 수단 강화는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억제를 위한 것이고, 비핵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에는 여전히 많은 다른 요소들이 필요하다.

북한과 교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한다는 2차 제재(secondary boycott 혹은 secondary sanction) 등도 논의되고 있다.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을 앞두고 미국이 행했던 대이란 2차 제재는 이란의 원유 수출로를 압박함으로써 압박 강화의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경우 대외 무역과 금융교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압박이 2차 제재의 핵심을 이룰 수밖에 없다. 이미 2016년도 홍상그룹에 대한 제재를 통해 대북 경제제재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2차 제재로 중국의 기업과 금융기관을 미국이 독자적으로, 국내법에 근거하여 제재하는 것을 주권에 대한 간섭으로 여기고 있다. 2차 제재가 실행될 경우 중국은 이에 반발하여 기존의 대북 제재에 대해 약화된 자세를 보일 수 있고 또한 미국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복을 시행할 수도 있다. 따라서 2차 제재보다는 미중 간의 사법제재 협력의 형태로 대북 경제제재의 수위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결정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광범위한 노력이 단기적인 해결책을 도출해내지 못할 경우 한미동맹을 어떠한 식으로 강화해나갈지 긴 안목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북한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억제전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김정은은 2013년 3월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병행추진하겠다는 병진노선을 내세운 바 있고, 4년째를 맞이하는 현재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정은에게 핵무기 고도화는 국내정치 정당성을 강화하고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협상카드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생존을 보장받고 향후 한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점해 보다 공세적 대남, 대미전략을 추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북핵무기의 군사적 무용성을 보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철저한



억제력 개발은 필수적이다. 한국은 독자적으로 한국형 대량보복 및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계획하고 있다. 처벌과 거부 억제를 동시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탐지자산이 부족하고 한국형 억제가 완성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요한다.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위해서도 미국과의 군사협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면 한미동맹의 역할과 성격을 둘러싸고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경제 및 정치적 압박과 제재가 유지,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국의 참여는 절대적이다. 중국은 강력한 대북 압박이 북한 정권의 생존을 위협하고 만약 북한이 급변사태를 맞이할 경우 중국의 지정학적 이익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참여는 북한의 붕괴를 방지하지만 비핵화를 이루기에는 충분한 수준의 대북 압박에 한정될 것이다. 참여의 수준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강화가 대북 억제 목적에 국한된 것이라는 점과 중국의 제재 참여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한미 간의 군사적 협력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이 불가피한 점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중국은 북핵 문제로 한미 군사협력이 과도하게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한미동맹 강화는 대북 억제력 강화 및 중국의 대북 압박 참여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동시에 한국이 한미동맹을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려고 강화하는 것이 아님과, 북핵 문제 해결을 기점으로 한중간의 전략 협력이 더욱 요긴함을 인식하고 있음도 설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드문제에 대한 타개책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면 한국의 억제력 향상도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한미간의 군사협력도 필수적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군사균형 파괴보다 미중간의 동북아 군사균형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일층 가속화된 대북 억제력이 강화될 것인데, 사드 문제와 같은 유형의 한중관계 긴장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한국은 한미동맹 강화를 북핵 문제 해결의 전체적 과정 속에서 기획하고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핵문제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 못지않게 중요

한 것은 한미동맹의 지역적, 지구적 역할이다. 트럼프 정부는 동맹의 공정한 부담 분담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나토, 특히 독일에 대해 부담 분담의 압박을 언급하고 있고, 일본 역시 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일본의 부담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역시 미국과의 정기적 협상을 통해 동맹 부담을 적정 수준에서 설정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중요한 점은 동맹의 이익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과 부담 추가 부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안보는 경제적 이익과 비교되기 어려운 절대적 이익의 문제이다.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주요 국가들과의 전반적 관계를 강화하여,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한편, 경제적, 사회문화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바퀴살 체제의 동맹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고 이는 미국의 안보이익은 물론 경제적 이익까지도 보장하는 중요한 기제이다. 한국 역시 한미동맹을 통해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 오는데 이르고 있다. 동맹의 경제적 이익 전반을 통찰하는 시각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부담 분담의 문제는 하나의 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외교정책의 다양한 측면에 아직 총체적 비전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국익 추구 과정에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동맹을 통한 상호이익을 정확히 규정하여 미국과의 대화 속에서 전략적 공감대를 이루어야 한다.

동아시아는 미국의 안보, 경제이익을 위해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고, 한국에게는 생존과 발전의 터전이기도 한 지역이다. 향후 동아시아 안보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중관계가 될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동아시아에 대한 경제차원의 전략 이외에 안보차원의 지역전략, 대중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다급한 점검도 필요하지만 동아시아와 중국에 대한 전반적 전략 점검이 사실 더 시급한 상황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이러한 노력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적 후퇴로 이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국은 한편으로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 확보에 최대한 협력하면서 동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미 환태평양파트너십의 와해 이후 중국 중심의 다

자경제협력의 틀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비롯, 일대일로 사업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확대, 그리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 없는 환태평양파트너십, 이에 대한 중국의 참여 등도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경제아키텍처는 안보상황과 긴밀하게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 국익우선주의에 입각한 동아시아 지역 경제 전략은 결국 미국의 안보적 위상을 약화시켜 미국의 국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미동맹을 놓고 한국은 동아시아의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 설정을 계속 고민해나가야 한다.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한 동아시아 전략 속에서 지역 안보를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지 미국과의 지속적인 전략협력이 필요하다. 트럼프 정부의 협의의 이익 추구 전략이 동아시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미국 스스로가 합리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동맹국들의 정확한 판단과 제언이 필수적이다. ■

- 라운드테이블 참가자(가나다 순)\_ 박원근(한동대), 손 열(연세대), 이동률(동덕여대), 이숙종(EAI), 전재성(서울대), 최종건(연세대), 하영선(EAI)
- 대표집필 전재성\_ EAI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주요 저술로는 《정치는 도덕적인가》, 《동아시아 국제정치 : 역사에서 이론으로》,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탈근대론과 현실주의의 비판 고찰”, “유럽의 국제정치적 근대 출현에 관한 이론적 연구”, “강대국의 부상과 대응 메커니즘 : 이론적 분석과 유럽의 사례”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_신영환 EAI 수석연구원  
문의\_02 2277 1683 (ext. 107), yhshin@eai.or.kr

